

# 전북자치도 '합성패키지 사업' 큰 인기

청년들이 전북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자치도의 '청년 합성패키지'가 청년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합성패키지'는 '합계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자치도의 대표적 청년 지원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구 직자지원)'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자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자산형성지원)'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전북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지원금은 학원 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합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창업 관련 특강과 면접 교육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구직청년 청년활력수당 2000명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재직청년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 월30만원씩 1년 지원

전북청년들의 자산형성 위한 두배적금사업, 호응도 커  
참여 경험 청년들 평균 97% 타인에 추천... 만족도 높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도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등 6개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생활용품, 건강관리, 교통비, 문화 여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년간 지원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도내 거주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과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금융 및 재무 컨설팅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만 18세에서 39세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이 월 최대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2년 만기 시 적금 이자를 포함,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 사업 규모를 3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

대했으며, 관심이 높은 부동산 등 콘텐츠를 강화한 금융 컨설팅 교육도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합성패키지'의 만족도 조사를 7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했으며, 사업 참여자의 평균 97%가 이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재직청년의 경우 현 직장의 재직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5.1%, 전북 생활에 대한 지역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1.3%에 달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도는 청년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도 '합성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 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만족도가 높은 합성패키지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청년들이 성장하고 정착하고 싶은 전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중증화상환자 응급처치·이송 지원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화상환자 응급처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오른쪽)과 신재준 대전화병원 병원장이 업무협약서를 든 채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도, 납세담보 계약으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

공매 통한 지방세 납부 촉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자들이 여러 채권자의 독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처분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매를 통한 신규 취득세 발생으로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보험료 80% 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끝나지 않는 9월의 더위 속에서 농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비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단 2만원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만 18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인근에서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뉘며, 농업인은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0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해 농업인은 최대 20%인 약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청년참여예산 온라인 소통 플랫폼' 21일 정식 오픈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전북 청년정책 실현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사업성 검토 후 결과·예산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관련 정책을 제안받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정식 문을 연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참여예산을 도입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을 지난 11일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도 청년의 날(9월 세번째 토요일)을 맞춰 정식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발히 활용돼 온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며 청년의

정책 참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은 18~39세의 청년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간단한 청년인증 절차 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공감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은 30일 간 청년들의 '공감'을 받게 되며, 15개 이상의 공감을 받는 제안은 덧붙여진 의견들과 함께, 소관부서에 전달된다. 이후 해당부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게시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청년참여예산에 반영해 정책으로 추진된다.

청년의 제안이 예산에 직접 활용된다는 점에서 청년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정책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와 공공재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 및 예산 활용에 대한 기초를 주제로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청년참여예산학교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전북자치도 유튜브 등에 게시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청년참여예산학교의 횡수를 늘리고 주제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이후 앞서 전북자치도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청년

도약프로젝트' 등 청년이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공모사업과 각 지역의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청년참여 정책들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청년정책 수요가 플랫폼을 통해 도정에 반영되는 등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된 만큼,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 갈 청년들과 함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 비상응급의료체계 가동 도민 안전 추석 보내기 보탬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18일) 전북 지역에서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돼 큰 의료사고 없이 도민들의 안전한 명절나기에 보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운영된 의료시설은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병의원 및 약국 1,928개소다.

도와 14개 시군은 응급진료상황실을 가동해 이들 의료시설에 대한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모든 의료시설이 정상 운영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동안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총 7,281명의 환자가 방문했고, 958건의 응급환자가 성공적으로 이송됐다.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돼 총 311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도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주수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이송된 손가락 절단 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기도 했다.

특히, 원광대학교병원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연휴 기간 중증화상환자 등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추석 연휴 큰 의료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 의료진, 구급대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도민들도 자신해서 통해 병의원을 이용하고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자 수 7,281명은 지난해 추석 8,124명과 비교해 10%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만호 기자



지난 12일에 열린 새만금개발청 개청 11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경안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 '10.2조 투자유치, 더 나은 미래로'

새만금청 개청 11주년 기념식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10.2조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개최된 개청 11주년 기념 행사에는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년 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회고하는 자리부터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과 보고, 직원들의 축하 공연, 기념사, 기념 떡 커팅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10.2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낸 새만금 현재,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며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새만금청은 밝혀왔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용지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근로·정부여건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람과 자본이 모여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시 건의사항 반영 요청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의장단은 지난 13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시 경제청장민과 함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군산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시에서 제시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조성, 새만금 수변도시 내 주거지 용도 변경, 새만금 폐수관로 위치 재검토, △권역 일원 국가정원 조성, △새만금 수생태양광 발전사업 2단계 유지 등이 다. /군산=이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남원시, 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전국우수사례 공모 선정

배수펌프장 축수로 58억 예산 절감, 전국 6개 우수사례 중 하나  
2026년 재해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가점·기관 표창 수여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동 추진한 '홍수에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재해위험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설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제성을 겸비한 설계안을 제출한 결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단 6곳만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는 최근 5년간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으로는 △정비방향의 적절성 △참의성 △예산 절감 등 경제성 △효율성 △적극성 △활용성 등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특히 경제성 부문에서 큰 점수를 받았으며, 방동마을과 소하천 유역을 통합 검토해 배수펌프장 1개소를 축소하고 대안 채택으로 5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남원시 사석 홍수에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 중이며, 배수펌프장 2개소 신설, 소화천 정비, 토석류 유입 방지 시설, 우수관거 정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철 태풍 시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를 입던 곳으로, 이번 사업은 오랜 주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도 신규 재해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에 가점을 받게 되었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